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 5년간 인재 41.3만명 키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코드스테이츠 찾아 대책 발표
기존 양성사업에 8.9만명 추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SW 인재양성 현장방문 일환으로 서울 서초구 코드스테이츠를 방문, 온라인상에서 가상기업채용박람회를 체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SW) 인재 총 41만3000명 양성에 나선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이 2만9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5년 간 기존 인력에 8만9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9일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 '코드스테이츠'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계획에는 대학 등 교육 과정 11만명, 기존 정부 인력양성사업 21만4000명에 더해 8만9000명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향후 5년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2만9000명의 3배가 넘는 8만9000명을 더해 총 41만3000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는 고소득 정보기술(IT) 직종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지만 인재 영입경쟁이 치열해지고, 중소·벤처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교육을 거쳐 인재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강사와 훈련기관 부족 등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 배출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인재양성의 틀에서 벗어나 중소·벤처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인력양성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 주도의 단기 훈련과정을 늘리고 재직자 훈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기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청년들에게 현장 실습 중심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정부도 훈련비와 채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2만1000명의 소프트웨어 중급 인재를 양성해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중기적으로는 고급·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대학 간 협력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이 대학의 교육장과 기숙사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력 사업인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대학이 기업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형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전공자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늘리고, 인턴십 등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고급인재 2400명을 포함한 6만800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정부는 또 인재 양성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는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활용해 평가, 관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은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인 만큼 인력 양성에 적극 투자하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입찰담합 5개사에 과징금 125억 부과

공정위, 철도용 침목 10년간 담합
'담합품목 최다' 태명실업 檢 고발

(주)태명실업 홈페이지.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10년 가까이 장기간 담합한 5개사에 총 125억 여원의 과징금 폭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찰담합)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품목 최대 사업자인 태명실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업자는 2009년11월~2018년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 건설사 등이 발주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225억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철도용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바이블록 침목이 담합대상이 됐다.

이들은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했고,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 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한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정위, 유통사 반품갑질 차단 지침 시행

판례 등 반영 '반품조건' 구체화
시즌상품 여부 등 종합적 고려해야

대형유통사의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한 개정 반품지침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대형유통사가 불시에 반품을 요청하면 납품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유통사와 납품업체가 반품 품목 등을 사전에 약속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5월17일~6월7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와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예측하기 힘든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지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도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하고,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반품 기한을 정하는 등 반품대상 품목, 반품절차, 반품비용부담 등에 관한 예시를 추가했다.

크리스마트 트리 등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번 반품지침 개정에 따라 반품 거래가 이전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반품 물량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사와 납품업체의 갑을관계에 변화가 없고, 그런 관계가 반품 약정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대형유통사가 약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반품 약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유통사의 반품 갑질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이준헌 과장은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반품을 없애는 게 가장 큰 이득이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유통사와 납품업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재고부담의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업부, 기술혁신 대표기업 45곳 선정

4년간 총 900억 수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신규로 사업에 선정된 45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부 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규 선정된 45개 기업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중 혁신역량이 높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 향후 4년간 차세대신기술 및 세계일류제품 개발을 위해 총 900억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15억~20억원이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이후 전세계 가치사슬 재편,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소부장고도화,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과제가 중점 선정됐다.

총 45개 지원과제 중 43개 과제가 디지털전환(37.8%), 소부장고도화(31.1%), 바이오헬스(20%), 탄소저감(6.7%) 분야다.

ATC사업은 올해 19년째를 맞고 있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기술개발 계획을 토대로 선발해 우수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통식품 장인 발굴 '식품명인' 지정 공모

농식품부, 30일까지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10일~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해 우리 고유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80명의 명인이 활동하고 있다. 분야별로 전통주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장류 13명, 떡·한과류 9명, 엿류 7명, 김치류 6명, 차류 6명 등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 접수 기간 중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시·도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7월23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 진흥과로 추천하고, 농식품부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